



24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광남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에서 이승배 광남일보 사장과 정성균 독자권익위원장 및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전남 광주 통합 앞두고 지역 해법 모색해야”

광남일보는 24일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독자권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기존 위원회가 새롭게 재편된 이후 첫 회의로, 정성균 세무법인다솔 누리보전 대표세무사가 신임 독자권익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회의에는 정성균 위원장을 비롯해 조상일 대동문화재단 대표, 이근철 전 전남발전연구원장, 박봉순 동산대 지역협력본부장, 조승우 전 광산구 지역경제협력센터장, 신식 금호타이어 커뮤니케이션팀 책임, 신연범 광주신용보증재단 감사실장, 신현구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 정희 해양에너지 대표, 송형일 에스이엔에스 대표, 정일균 변호사, 김봉철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 김동찬 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김홍석 전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최선미 CS테크 대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행정통합 이후 발전 방향 △20조원 규모 재원 활용과 산업·경제 기반 강화 △기업 유치와 청년 인재 유출 문제 △중동 경제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 △지역 언론의 역할과 디지털 전환 과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 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지역의 구조적 과제를 짚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 그리고 지역 언론의 공론장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성균= 지역 언론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광남일보의 이미지 개선과 애독자 범위 확대를 위한 발전 방향과 지면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독자권익위원회의 역할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에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독자 권익 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기능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독자의 권익 보호를 넘어 독자의 이익 창출까지 자문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역신문의 역할 역시 단순한 발생 뉴스 전달을 넘어 시민의 실생활에 밀착한 심층 취재와 대안 제시형 보도로 확장되어야 한다. 모바일 친화적인 플랫폼 구축과 지역 아카이브 구축, 독자의 이익 창출에 도움이 되는 검증된 광고 시스템 마련, 독자권익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함께 요구된다. 지면 개선 측면에서는 텍스트 중심의 구성에서 벗어나 인포그래픽과 데이터 시각화 자료를 적극 활용해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근철= 전남·광주특별자치 출범은 역사적 순리이자 새로운 변명의 기회다. 2026년 7월 국내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통한 전남·광주특별자치 출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출범은 전라도 새로운 전년을 '고난에서 변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출범을 전환점으로 장기간 이어진 지역 소외를 극복해야 할 시점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변화는 결국 지역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자치 초대시장은 지역의 역사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역할과 열정, 진정성을 갖춘 인사가 선임될 필요가 있다.

△조상일=전남광주 행정통합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4년간 20조원 규모의 예산 지원이 예정된 만큼 기대감

이 크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측면이 있는 만큼 주민과 정치권 모두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안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을 제대로 선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는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알기 어려운 '깜깜이 선거'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경선이 끝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정책 경쟁은 뒷전으로 밀려난 모습이다. 통합 이후에도 광주는 행정·문화·경제의 중심지라는 점은 분명하다. 동시에 광주·전남은 한국 문화예술과

전달을 넘어 행정과 의회의 역할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AI·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과 재생에너지 정책이 지역 경제와 고용, 시민 삶에 미치는 변화를 충실히 전달하는 보도도 필요하다. 아울러 일자리·교통·주택·지역개발·청년 정책 간 연계성과 효과를 함께 살펴보는 시각도 요구된다.

△김홍석= 행정 통합과 교통망 확충으로 '단일 생활권'이 형성되는 만큼 보도의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다. 광주와 전남을 나누는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정일균=광남일보는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일간지로서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론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중앙 언론에 비해 위축된 현실 속에서 독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 지역 밀착형 탐사·심층 보도를 강화해 행정·복지·환경·교육 등 생활 밀착 사안을 단순 전달을 넘어 구조적 원인과 해결 방향까지 짚어내야 한다. 지자체 예산 집행과 공공기관 운영,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역 언론의 감시 기능도 중요하다. 법률·생활 정보 제공 기능 확대도 요구된다. 법적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통합의 취지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 마련이 요구된다.

△신식=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 지역 소재 기업 현황을 살펴보고 지자체의 기업 유치 전략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 출신 우수 인재의 유출을 최소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광남일보가 타 지역과의 규모별 기업 현황을 비교 분석, 지역의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짚어줘야 한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를 통해 통합특별자치 문제가 원인을 파악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중장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 심층 취재를 통한 분석과 현실적인 대안 제시로 지역이 경제특별시로 탈바꿈해 더 이상의 인재 유출이 없고 기업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신연범=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이 지역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료 확보 차질로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급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피해와 소상공인 경영 악화가 우려되며, 광주에서는 자동차와 가전업체가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 협력업체와 중소 부품사로 부담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 광남일보가 단순한 해외뉴스 전달을 넘어 중동 분쟁이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보도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 대응과 지원제도, 금융 지원책 등을 신속히 안내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보도가 필요하다.

△최선미=광남일보를 2년 가량 구독 중인데 기업인들의 성장 과정과 현황을 잘 소개해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기업인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과거에는 기업인에 대해 단편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도 있었지만, 신문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시각이 달라졌다. 특히 일상적으로 신문을 자주 보지 않는 환경에서도 이러한 콘텐츠는 의미 있게 다가왔다. 전남·광주 통합 이후에는 다양한 기업인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해 소개해줄 것 바란다. 이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꿈과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봉철=지역 언론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 광남일보가 젊은 세대와 지역사회를 잇는 매개체로 역할을 해야 한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창구로서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이끌고 언론의 본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정리=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남일보는 24일 본사 1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광남일보 독자권익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 대응·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과제 첨단산업 전략기업 유치 점검...청년 인재 유출 대책 필요 통합특별시 대비 심층보도 강화·디지털 전환 가속화 요구 ”

민중 정신의 근원지로, 글로벌 K-컬처의 기반이 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는 전남·광주를 K-컬처의 발원지이자 생산지로 선언하고, 장기적인 발전 청사진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신현구= 광남일보가 지역에 뿌리를 두면서 전국으로 확장되는 플랫폼 언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면과 온라인의 균형 전략이 중요하다. 지면은 중앙년층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과 정책을 신뢰성 있게 전달하고, 온라인은 젊은 세대와 향유를 겨냥해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인 콘텐츠로 확장해야 한다. 특히 향후 네트워크를 활용한 뉴스레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지역 인물과 산업·행사 소식 등을 통해 독자층을 넓히고 지역과의 연결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과 재도전 생태계, '지산지소' 확산 등을 다루는 기획 보도가 요구된다. 지역경제와 산업을 깊이 있게 다루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플랫폼 역할이 필요하다.

△송형일= 광남일보는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장 형성과 이슈 선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보도의 깊이와 완성도를 한층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전남·광주 통합특별자치 출범과 지방균형발전 취지를 고려할 때 산업·경제 발전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중심으로 한 보도가 중요하다. 단순 보도자료

화해술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산관 편중과 소외 지역 문제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문화진흥기금과 문화재생태특별회계의 집행이 현장 예술인들에게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전남 등부권과 군 단위 지역의 문화 소외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 참여형 문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유산 발굴과 문화예술인 조명 등으로 남도 문화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보도가 필요하다.

△정희= 광남일보는 지역 밀착형 보도에서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지역 현안을 단순 전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담아내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지난 2월 도시재생 관련 보도에서 특정 기관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행정 기관과 대학, 주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의미 있는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생활 밀착형 이슈와 구조적 문제를 균형 있게 짚는 보도는 중앙지와 차별화되는 경쟁력이며, 지역민의 신뢰를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 논의와 관련해 행정 효율성과 재정 활용 계획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기획 보도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약 20조 원 규모 재원의 활용 방향과 기간,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짚고, 장기 계획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견을 함께 담은 논의의 장이 요구된다.

분쟁, 소비자 피해, 행정 불복 등 일상 문제를 쉽게 전달하는 코너를 정례화하고 전문가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전환과 온·오프라인 연계 전략도 필요하다. 온라인 기사 품질을 높이고 SNS·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젊은 독자층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원칙과 편집 독립성 확보도 중요하다. 기사 정확성과 팩트체크를 강화하고, 법률 용어 사용과 무죄추정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독자 의견과 반론 보도 창구를 활성화하고 오보에 대한 신속한 정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

△박봉순=전남·광주 통합은 1980년대 분리 이후 원상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만큼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불가피한 흐름 속에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추진은 향후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때문에 시도민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통합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새로 선출될 특별시장에게 기본 구상을 제시하고, 통합의 방향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 20조원 규모의 지원금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 통합 이후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다는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 구성 없이 통합이 진행될 경우 지역 간 갈등과 예산 배분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며 오히려 소지역주의가 강화